

## 제1절 남북정상회담

### 1. 회담개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우리측 일행이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초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갖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6월 10일 긴급 전화통지문을 통해 “기술적인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옴에 따라 하루 늦춰진 것이다.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는 수행원 130명(선발대 30명 포함), 기자단 50명이 참가하였으며, 수행원은 공식수행원 11명, 특별수행원 24명, 일반수행원 95명으로 구성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용기 편으로 서해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 환영행사 참가에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며 환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직후 회담을 가졌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 2. 주요 회담 내용 및 「6.15 남북공동선언」

정상회담 기간중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최고당국자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분

하게 설명하였다.

4개 과제와 관련하여 김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국제적 냉전종식과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그리고 지식정보화로 인류사회가 최대의 혁명을 겪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반도만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남북이 대결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솔선수범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 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과 북이 상대방을 불신하고 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남과 북 모두 공멸하며, 누구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반대하며, 우리는 북한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북한도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북·미간에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면서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를 구축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다.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 라.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의한다.

이상과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 수긍과 이해를 표시하고 북측의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이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북간에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

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칙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두 정상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6월 15일 0시 조금 넘은 시각에 내외에 발표하였다.

— < 남북공동선언 요지 > —

- 나라의 통일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및 재개 노력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를 갖는 큰 사건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그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의 커다란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당사자인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제3국(인)의 개입이나 중재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당국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구축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냄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두 정상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의미로 강조될 만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성

사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초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응했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각종 회담의 다양화·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교류의 활성화와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 진입 토대 마련 등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다.

한편, 2001년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문제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관심사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후 2000년 9월 14일 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시 재확인된 사항으로 실현 여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았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북측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8월 방북한 우리측 언론사 사장단과 2001년 5월 평양을 방문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 등에게 서울 방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2001년 12월말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 제2절 남북장관급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0년 7월 19일 이한동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7월 21일 우리측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면서 회담 개최 일자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은 2001년 11월까지 남북을 오가면서 6차례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사항들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 여러 분야에서 개최된 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 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남과 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실무접촉 등을 가졌으며,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장관급회담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기본 자세로 ‘공동이익 추구’, ‘실천 중시’, ‘쉬운 문제부터 해결’을 제시하였다.

북측도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에 충실’,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 타결’, ‘실천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이행’해 나가자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남북 쌍방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대화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2000년 8·15에 즈음하여 남북, 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 개최,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문산-개성간 24km) 연결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1~4차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재규(통일부 장관)	단 장	전금진(내각 책임참사)
대 표	엄낙용(재정경제부 차관) 김순규(문화관광부 차관) 김종환(국방부 정책보좌관) 서영교(통일부 국장)	대 표	김영신(문화성 부상 겸 무대작품 국가심의회위원회 위원장) 유영선(교육성 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량태현(내각 사무국 과장)

\* 우리측 엄낙용 대표는 제2차 회담부터 이정재 대표(재정경제부 차관)로 교체되었고, 제3차 회담부터 우리측 김종환 대표와 북측 김영신 대표가 각기 김형기 대표(통일부 실장)와 허수립 대표(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지도국 처장)로 교체되었음.

#### 나.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등 7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신규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등 5개항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북측에 촉구하고, 모든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실현, 남북간 직항로 개설, 말라리아 공동방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2회 추가 교환,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실무협의 개최,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각기 제기한 의제를 놓고 협의한 결과,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추진,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남북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접촉과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합의사항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

검, 평가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석달반 동안 이루어진 일들은 크게 보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협력사업 이외에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매 회담시마다 많은 합의를 내기보다는 기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이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 양측은 세부 의제에 대한 다소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남북간 합의사항들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 생사교환·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문제를 차기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였다.

#### 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진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기간 중 남북 쌍방은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실무접촉 등을 가졌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2001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추진일정을 조정,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

였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차 장관급회담시 양해가 이루어진 사업 등을 협의·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간 전력협력문제, 남북어업분야 협력문제, 남북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2000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경제협력 관련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북측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제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제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2.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5차 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장소는 추후 협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1년 2월 27일 박재규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5차 회담을 3월 13일부터 3박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측도 3월 7일 전금진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5차 회담 일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전금진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제5차 북남상급회담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 옴으로써 제5차 회담은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회담이 중단된 남북관계 소강국면 하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

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하는 가운데 북측에게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회담 중단 6개월만에 북측은 9월 2일 임동옥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명의로 우리측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9월 6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측이 동의해 나옴으로써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연기된지 6개월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 모두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대표단 교체가 있었다.

#### << 5~6차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순영(통일부 장관)	단 장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 표	김진표(재정경제부 차관)	대 표	조성발(내각 사무국 참사)
	윤형규(문화관광부 차관)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이봉조(통일부 실장)		허수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처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첫날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분야별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건설공사를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해안 도로를 조속히 연결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방문단 교

환 및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의 조기 개최 등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남북경협 4개합의서 발효,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제5차 장관급회담의 일방적 불참 및 연기, 북측 선박의 우리측 영해 무단통과 사건, 8·15 남북공동행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방북단의 3대 헌장 기념탑 앞 행사 참석과 돌출 발언으로 물의가 빚어진 사실 등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한편 북측은 당국간 대화·협력 진행과 함께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족 공동의 이익 및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새롭게 협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남-북-러 철도연결 및 가스관 통과, 상선의 상대측 영해통과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등에 합의하는 등 경협분야 9개항을 포함한 총 13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1) 당국간 대화, 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 (2) 추석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 (3)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당국간 회담 개최 합의
  - 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
  - ②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실무접촉 개최
  - ③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10.4)
  - ④ 남-북-리 철도 연결 협력,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 ⑤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를 협의하기 위해 해운실무접촉 개최
  - ⑥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대책 협의를 위해 11월중 현지조사 착수
  - ⑦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빠른 시일내 발효
  - ⑧ 동해 공동어로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
  - ⑨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및 실무협의회 개최
- (4) 태권도 시범단 상호교환(10월 북측시범단, 11월 우리측시범단)
- (5)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0.28~31)

### 3.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5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1년 10월들어 금강산관광 당국간회담이 개최(10.3-5, 금강산)되었으며,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태권도 시범단 교환(10월중),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제6차 장관급회담(10.28-31)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은 10월 12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9.11 테러 사태 이후 우리측의 경계태세 강화를 구실로 ‘남측의 살벌한 경계태세 분위기’하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및 태권도시범단 교환을 연기하고 모든 당국간 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장

소를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같은 날 홍순영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태권도시범단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시하고,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후 9차례의 전화통지문 교환에도 불구하고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장소문제로 비생산적인 논쟁을 지속하는 것 보다 대화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북측의 금강산 개최 제의를 수용하였다.

당초 제6차 회담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되어 14일까지 금강산 호텔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우리측은 ▲9.11 테러사태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제5차 회담 합의사항들의 이행일정을 재조정하며 ▲남북간 대화국면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비상경제조치 해제에 대한 우리측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5차회담 합의사항 이행일정의 재조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경계강화조치가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취해진 것임을 설명하고, 이는 남북간 여러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공조 등 우리측의 외교활동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남과 북이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국제사

회의 이해와 지원을 받을 때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근본원인은 방대한 군사력이 남북사이에 대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함을 설명하고, 북측도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설득하였다.

남과 북은 3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접촉, 실무접촉 등을 통해 12월초 4차 이산가족방문단 상봉,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등에 의견접근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장소, 제7차 장관급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 제3절 남북군사분야 회담

#### 1.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남북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함께 군사분야의 화해·협력도 균형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지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조속한 개최 협의’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후 우리측이 2000년 9월 11일 송이버섯 전달차 서울에 온 북측의 박재경 대장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9월 13일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동의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의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회담개최 일자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해 합의하고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성태 국방부 장관	단 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차석대표	김희상 국방부장관 특보 (중장)	부단장	박승원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중장)
대 표	김국현 국방부 국장 (준장)	단 원	김현준 인민무력부 보좌관 (소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국장		로승일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이인영 합동참모본부 과장 (대령)		유영철 판문점대표부 부장 (대좌)

회담에서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또한 상호 부대이동 통보, 군 인사 교류, 군사 정보 교환,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당면과제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군사적 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를 주는 군사행동 금지,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남과 북의 인원, 차량, 기재의 비무장지대 내 출입을 보장하는 문제는 실무급에서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쌍방은 두차례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협력하는 문제등 5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채택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
-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
-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가과 안전을 보장하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 구체적 세부사항 추진
- 남북 연결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측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2001년 10월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이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2.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년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2000년 10월 7일 김일철 북측 인민무력부장에 게 서한을 보내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10월 13일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2000년 10월 11일 ‘유엔군측과 비무장지대 개방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우선 해결한 조건에서 쌍방 군사실무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신을 보내온데 이어 10월 16일 유엔사측에 ‘남북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서장급 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후 유엔사와 북측은 2000년 10월 18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4차례의 비서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비무장지대 일부 개방구역의 명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하고 남북관리구역내 군사적 문제들을 남북의 군대들이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엔사와 북측간 ‘남북관리구역 설정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북 쌍방은 2000년 11월 28일부터 2001년 2월 8일 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 「통일각」을 오가며 5차례에 걸쳐 군사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덕 국방부 차장 (준장)	단 장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 표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대령)  이명훈 작전부대(대령) 이명훈 육군건설단(중령) 정덕모 건설교통부 과장 정진양 국토관리청 과장	단 원	배경삼 인민무력부 상급참모 (상좌)  정창욱 인민무력부(상좌) 리병우 인민무력부 과장(대좌) 김기복 인민무력부 상급참모 (상좌)

\* 정진양 대표는 1차 회담시만 참가, 2차 회담부터는 쌍방 각기 5명씩 참가

2001년 1월 31일 진행된 제4차 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의 폭과 지뢰제거 범위 등 6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했으며, 2월 8일 제5차 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다.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는 폭 250m의 남북관리구역 설정, 동 구역내 철도·도로 건설 및 운행·유지를 위한 지뢰와 폭발물 제거, 철도·도로 연결 공사 방법과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접촉과 통신 및 공사인원의 경비와 안전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요지 >

☐ 남북관리구역 설정

- o 기존 경의선 철도노반 기준, 250m 폭 설정

☐ 지뢰 및 폭발물 제거

- o 계절조건 고려, 작업 1주전 상호 연락, 지뢰제거 작업 동시 착수
- o MDL부근 쌍방 400m 근접시 남측 화,목,토/ 북측 월,수,금 작업

☐ 철도와 도로 작업

- o 쌍방 200m 근접시 남측 월,화,수/ 북측 목,금,토 작업
- o 공사 마감단계시 MDL 20m 월선 허용

☐ 공사현장 책임자간 접촉 및 통신연결

- o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군사실무 문제는 전화통지문을 통한 협의 원칙
- o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에 유선통신 2회선, 팩스 1회선 설치

☐ 작업장 경계 및 안전보장 대책

- o 안전보장을 위해 100명 이내의 경계병력 운용
- o 경계병력의 무장 : 개인화기, 개인당 실탄 30발로 제한

☐ 합의서 발효·폐기 및 수정·보충

- o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발효

한편 남과 북은 이 합의서를 쌍방 국방장관이 서명한 후 2001년 2월 12일과 14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개최하여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11일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로 동 합의서의 서명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된 일정에 대해서는 차후 통지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합의서가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2001년 3월 9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조속한 시일내 합의서 서명·발효와 관련된 일정 통보’를 촉구한데 이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적 보장 합의를 즉각 발효시켜 금년내에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 사이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 6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는 ‘10월 12일과 15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쌍방 국방장관의 서명절차를 거친 합의서 교환을 위해 수석대표 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검토가 끝나면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동 합의서의 서명 교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 제4절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2000년에 3차례, 2001년에 3차례 모두 6차례의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2000.9.27~30, 제주)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본 데 이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첫 회의를 2000년 12월 26일경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1. 1~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분야 회담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긴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접촉부터 이루어졌다. 2000년 9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북한 김용순 특사 방문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이 두 차례 개최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근경(재정경제부 차관보)	정운업(무역성 지도국장)
대 표	조명균(통일부 심의관) 김상열(산업자원부 심의관) 안창호(법무부 과장)	리영남(재정성 부국장) 서정찬(무역성 과장) 최정식(재정성 과장)

\* 우리측 안창호 대표와 북측의 최정식 대표는 제2차 접촉부터 참가(제2차 접촉부터 회담대표가 쌍방 각기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였음.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은 2000년 9월 25일~2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4개의 제도적 장치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합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적시한 만큼 이에 국한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2개 안에 대해서는 향후 장관급회담에서 확인한 후 차기 접촉시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차 접촉에서 공통부분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해서 각기의 입장과 조문별 공통점·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남과 북은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한데 따라, 외국산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합의



하였다.

쌍방은 합의서별 구체적 조문내용을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조율하여 제2차 접촉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 타결키로 합의
-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 차이점들은 제2차 접촉에서 합의
-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절차에 따라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

제2차 실무접촉은 당초 2000년 10월 1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사정으로 다소 연기되어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특히 4개 합의서의 전문에 남북사이의 경제교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할 것과 내국민 대우, 중재인의 수 및 자격,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합의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어렵다고 하면서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지 과세, 양측의 재결집행제도 이용, 무이자 청산계좌 개설 등을 제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차관으로 제공한 식량의 분배투명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식량차관 계약서상 ‘투명성 보장’ 규정에 따라 식량분배 과정과 분배실적의 설명 및 현장방문과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쌍방은 부문별 실무대표접촉과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정, 11월 11일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 합의를 채택하고 가 서명하였다.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정식서명하였으나 발표절차를 거친 문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 — < 4개 합의서 요지 > —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전문 및 12조
  - 상호 투자의 허용 및 보호, 수용·국유화 제한 및 보상, 투자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상호 정보제공, 분쟁해결방법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전문 및 28조
  - 남한과 북한의 세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조세를 중심으로 양측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정하고, 거주자·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이중과세 방지방법(사업소득 면제방식, 투자소득 세액공제방식), 상호협의절차, 정보교환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전문 및 19조
  - 남북공동 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중재인의 자격 및 활동,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집행보장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전문 및 10조
  - 남북한이 합의하여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결제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합의
  -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미달러화) 등 규정

##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 합의에 따라 2000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전력협력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원장	이정재(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심의관) 유창무(산업자원부 심의관) 최재덕(건설교통부 국장) 김해중(국무총리실 심의관)	오광홍(전기석탄공업성 부상) 함기석(철도성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먼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를 타결하고, 전력협력·경의선 철도-도로연결·개성공단·임진강 수해방지문제를 균형적으로 다룰 것을 제의하였다.

전력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전력사정과 운영상황·기술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우선 전력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전력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전력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관련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위한 접촉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 제정 및 전력·용수공급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당국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전력협력,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 및 동해어장 제공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특히 전력협력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위원장 접촉,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에 대해서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2001년 1월 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먼저 북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12차례에 걸친 서한문 및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하여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월 3일 서명·교환하였다.

— < 합의서 요지 > —

-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② 전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전력실태공동조사단 구성·운영
  -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여 전력실태공동조사문제 등을 토의,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7~10명 범위에서 구성하며 2월중 공동조사 착수
- ③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협력을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 구성·운영
  -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10명 범위에서 구성하며 3월중 공동조사 착수
- ④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무협의회 시작
- 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1년 2월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협의·확정

—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 제1조 위원회 구성

-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위원은 각기 편리한대로 함
-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둠

○ 제2조 위원회 기능

-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
-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협의·이행
-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 작성

○ 제3조 위원회 운영

-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
- 필요한 경우 회의 사이에 분야별 실무협의회 회의를 운영
-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
-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

제2차 회의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2001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10월 12일 조평통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 모든 당국간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함으로써 예정된 날짜에 열리지 못하였다.

이어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2차 회의 개최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동 회담이 합의없이 종료됨에 따라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나.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유창무(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오광홍(전기석탄공업성 부상)
대 표	엄종식(통일부 과장) 김인섭(한국전력 전력협력팀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우리측은 남북간 전력협력을 위한 합리적·효율적 논의를 위해 전력실태 조사문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력실태공동조사단 구성·운영 합의서」(안)을 우선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이 구상하고 있는 전력실태조사 추진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조사항목을 발전 및 계통·송배전으로 분류하여 자료제공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는 2월중에 착수하여 우선 7일간 실시할 것과 북측도 우리측을 방문하여 상응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 쌍방이 전력제공 문제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서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력제공의 양과 시기부터 확정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송전방식으로 전력협력을 적극 실현하자고 요구하였다.

또한 북측은 전력실태조사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우선 50만KW 송전에 필요한 현지조사부터 시행하고 북측의 남천·개성과 우리측의 양주·문산지역중 합의되는 지점을 현지답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측이 전력공급은 이미 양해된 사항이므로 50만KW 송전을 전제로

제한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우리측은 전력제공문제는 지금까지 어떠한 남북간 회담·접촉에서도 합의된 바 없으며, 남북전력협력은 우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쌍방간에 전력실태 조사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문안정리에 들어가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타결하여 2월 중에 실태조사에 착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전력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쌍방의 기본입장에 차이가 확연한 만큼 합의서 문안정리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기본전제, 목적 등에 입장차이가 명백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문제의 논의와 문서교환방식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남북 쌍방은 앞으로 계속 상기 문제에 대해 협의·추진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 다.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차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최영철(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대 표	박경석(통일부 과장) 노재화(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장준갑(국토환경보호성 과장) 김봉철(민족화해협의회 부원)

우리측은 임진강유역의 수해를 방지하고 남북 쌍방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부적인 공동조사가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이러한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효과를 정확히 검증하여 쉬운 사업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2001년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조사단 구성, 조사지역,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남북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안)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 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산림조성, 강하천 정리, 큰물조절언제 건설’ 등을 제의하는 한편,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7개항으로 구성된 「북남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조사단 구성, 조사지역, 조사시기, 조사결과 처리 등에 있어 북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재강조하고,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진강 수해방지의 근본은 ‘언제(댐)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사업목표를 확정된 후 필요한 지점만 조사하자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원칙, 방향만 합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자료교환, 사진촬영, 왕래절차 등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합의서 문안 토의 과정에서 우리측은 이번 회의가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실무협의회 권한 밖의 문제이며, 공동조사를 선행한 후 상위기구에서 대상사업을 확정짓도록 하자고 설득하면서 토의를 주도해 나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동보도문에 대해서도 북측은 세부문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하자는데 동의하면서도 제2차 회의 장소와 일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확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남북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각기 편리한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회의 종료후 우리측은 3월 3일 공동조사에 관한 우리측 합의서 수정안을 재작성하여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였으나 북측은 그후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인 남측의 현대와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01년 6월 8일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 양측 당국의 승인을 받아 육로관광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당국간 대화를 양측 당국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 9.15~18, 서울)에서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1차 회담을 10월 3일~10월 5일 금강산 지역에서 진행하였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택룡(내각사무국 부장)
대 표	박양우(문화관광부 문화관광국장) 양성호(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방종삼(무역성 부국장) 리창덕(국토환경보호성 과장)

우리측은 회담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로관광 실현과 관광특구의 지정·시행 등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금강산관광에 대한 관광객 및 투자자의 관심이

제고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측의 송현리와 북측의 고성간 도로를 연결하되, 임시도로를 2001년안에 개설하여 우선 육로관광을 실시하면서 2002년 10월까지 2차선 포장도로를 완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자간의 협의·추진구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해로를 이용한 기존의 사업을 먼저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되고 있는 사업추진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 후 다른 관광활성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로관광을 정상화하여 당장의 수익성을 높히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현대-아태간에 이미 합의해서 추진되어온 사항의 이행을 당국차원에서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측은 민간급으로 추진되어 온 금강산 관광사업을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북측은 육로관광에 대해서는 군사적 문제, 환경보전 문제 등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어렵다고 하면서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결국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남북 쌍방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1차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차기 회담을 10월 19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측은 제2차 회담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이 서로 왕래하면서 회담을 진행해 온 관례에 따라 우리측 지역인 설악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후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2001.11.9~14, 금강산)에서 2차회담을 12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으나 6차 장관급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제5절 남북적십자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데 따라 금강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세 차례 진행된 회담을 통해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3회), 생사·주소확인(2회), 서신교환(1회) 등을 합의·추진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1.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은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기륜(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단장	최승철(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표	고경빈(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김장균(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대표	리금철(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창훈(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

\* 우리측은 제2차 회담부터 김장균 대표를 최기성 대표(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로, 제3차 회담부터 박기륜 수석대표를 이병웅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로 교체하였으며, 북측은 제3차 회담부터 최승철 단장을 김경락 단장(북

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최창훈 대표를 리호림 대표(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로 교체하였음.

1차 회담에서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북측 이산가족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한 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남측 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순차방문 형식을 제시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8월중에 판문점 자유의 집 또는 통일각에 설치하여 월별 4회, 매회당 100명씩 면회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들 중 생사가 확인된 숫자 내에서 매월 2회 이상 서신교환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후 실시하되, 구체적인 송환방법 등은 9월중 협의할 것을 제의하고, 북측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을 8월 15일부터 3박 4일간 동시에 교환하며, 방문단 교환에 앞서 비전향장기수 송환 사업을 우선 시행하자고 주장하였다.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하면, 북측은 송환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송환 10일전에 우리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사업의 실시 순서에 대한 의견조정을 거쳐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후 9월초에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고, 적십자회담을 계속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를 협의·타결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합의서로 채택하였다.

— < 합의서 요지 > —

- 이산가족 100명, 책임자 1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 등 총 151명으로 구성된 이산가족방문단을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평양 동시 교환
-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 전원 송환 즉시 적십자회담을 통해 협의·확정
- 북측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 송환

##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2000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된 2차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면회소 설치 문제, 이산가족방문단 추가 교환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9월중에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 마치고 그 결과를 10월 중순부터 매월 2회 통보하며, 10월부터 매월 2회 서신교환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를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여 매주 쌍방 각기 100명씩 면회를 실시하고, 2차 이산가족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 방문단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1차 회담에 이어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생사·주소확인 사업은 시범적인 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하고, 서신교환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는 12월 중순경 제3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확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되, 면회소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12월 중순에 결정하고, 2차 이산가족방문단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3차를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교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상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을 계속한 끝에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산가족방문단을 두 차례 더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 < 합의서 요지 > —

-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을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동시에 교환
-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9·10월에 시범적으로 100명씩 교환하여 생사·주소확인 후 통보, 교환 규모 확대
- 생사·주소확인 된 300명을 대상으로 11월중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 구체적 문제는 3차 회담에서 협의·확정
- 3차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
- 3차 회담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

### 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당초 2000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2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일정 등으로 인해 이듬해인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2차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 확대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자는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생사·주소확인을 위해 2001년내 1만명씩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하고 생사·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서신교환을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를 3월말 판문점에 설치하여 매주 쌍방 각기 100명씩 면회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방문단 교환사업을 정례화할 것을 제의하고,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교류사업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1월 29일 생사·주소확인 1차 의뢰서에 대한 회보서를 교환하고 2차 의뢰서를 2월 9일 교환하며 이에 대한 회보서를 2월 23일 교환한다.

둘째,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며 1월 31일 회보자 명단 교환, 2월 15일 결과 통보, 2월 20일 최종명단을 교환한다.

셋째, 서신교환을 3월 15일 실시한다.

이에 대해 북측은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확대는 시범단계를 거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시범이 완료된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서는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되 2001년 8월 15일을 계기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것을 제의하였다.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일정 등 기 합의된 이산가족교류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측 제안과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된 안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미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의 재남가족 및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들의 추가 송환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2000년 9월 2일 이미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 63명을 송환하였으므로 동 문제는 종결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기존 합의일정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 이산가족면회소 설



치·운영문제, 방문단 교환 정례화 문제, 비전향장기수 추가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쌍방은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호 수정안을 제시하고 절충하면서 합의를 모색해 나갔다.

그 결과 쌍방은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등 기 합의된 사업의 일정을 확정하고, 생사·주소확인 등 시범적 사업 규모확대 문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① 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2.26~28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교환  
- 1.31 방문후보자 명단, 2.15 회보서, 2.17 최종방문단 명단 각각 교환
- ② 생사·주소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3.15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서신 교환 실시
- ③ 생사·주소확인 대상자 명단은 2.9 교환하고, 2.23 결과 통보
- ④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은 4차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
- 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는 4차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
- ⑥ 제4차 적십자회담은 4.3~5 개최, 장소는 추후 협의

그러나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우리측이 2001년 3월 2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2001년 12월 말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